

SBS 추석 특집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2018년 9월 20일- 21일

KANTAR PUBLIC

목 차

I.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1
- 2. 응답자 특성표.....2

II. 조사 결과

- 1.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3
- 2. 국정운영 평가 요인5
- 3. 정당지지도.....6
- 4.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9
- 5. 평양공동선언 최대 성과.....10
- 6. 북한 핵무기 포기 전망11
- 7. 남북미 종전선언 시점.....12
- 8. 작년과 살림살이 비교.....13
- 9.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14
- 10. 우리 경제 당면 과제16
- 11.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18
- 12. 9·13 대책 효과 전망.....19
- 13. 주택공급 확대 방안 평가.....20
- 14. 주택공급 확대 대책 효과.....22
- 15.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23
- 16. 2020년 최저임금 수준24

▣ 별첨 1. 통계 편

▣ 별첨 2. 설문지

1. 조사 설계

조사 기관	
조사의뢰기관	SBS
조사기관	KANTAR PUBLIC (칸타 퍼블릭)
조사 지역 및 일시	
조사지역	전국
조사일시	2018 년 9 월 20 일 (목) 15 시 ~ 9 월 21 일 (금) 20 시
표본 설계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유선전화면접 23%, 무선전화면접 77%)
표 집 틀	유무선 전화번호(RDD)
표본크기	1,029 명 (조사 완료 사례 수)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RDD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
응답률	10.0 % (총 10,340명과 통화 성공하여, 그 중 1,029명 조사 완료)
가중치 부여방식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 가중) (2018 년 8 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최대허용오차	± 3.1%p (95% 신뢰수준)

2. 응답자 특성표

BASE : 전체 응답자		조사완료 사례수	목표할당 사례수
	전체	1,029	1,00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97	496
	대전/충청/세종	113	107
	광주/전남/전북	107	100
	대구/경북	109	102
	부산/울산/경남	161	154
	강원/제주	42	41
	성별	남자	551
여자		478	503
연령별	19-29세	197	174
	30대	204	169
	40대	198	199
	50대	173	202
	60대 이상	257	256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2	28
	자영업	144	141
	블루칼라	187	180
	화이트칼라	306	289
	가정주부	149	165
	학생	85	76
	무직/기타	125	119
	모름/무응답	1	1
소득준별	100만원 이하	95	94
	101~200만원	121	119
	201~300만원	162	154
	301~400만원	145	141
	401만원 이상	396	384
	모름/무응답	110	107

* 본 보고서에 기록한 응답자 특성별 사례수나 문항별 조사 대상자 사례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조사완료사례수를 기재함.

* 가중치 적용 후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조사 결과의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 등이 될 수 있음.

1.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잘하고 있다' 72.1%

Q	선생님께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33.2%
다소 잘하고 있다	38.9%
다소 잘못하고 있다	12.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2.1%
모름/무응답	3.7%
<i>잘하고 있다 : 72.1%</i> <i>잘못하고 있다 : 24.2%</i> -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2.1% (매우 잘함 33.2% + 다소 잘함 38.9%)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전체		72.1	24.2	전체		72.1	24.2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74.1	22.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74.9	20.7
	대전/충청/세종	73.0	25.3		자영업	63.2	36.1
	광주/전남/전북	91.7	7.3		블루칼라	70.7	23.4
	대구/경북	56.8	36.5		화이트칼라	77.3	20.6
	부산/울산/경남	62.2	33.2		가정주부	73.2	24.4
	강원/제주	73.1	20.2		학생	67.9	23.6
성별	남자	69.6	25.7	무직/기타		72.2	21.2
	여자	74.5	22.7		더불어민주당	92.0	6.9
연령별	19-29 세	68.4	24.4	정당별	자유한국당	37.6	56.1
	30 대	79.8	18.4		바른미래당	57.4	42.6
	40 대	77.3	20.5		민주평화당	81.7	18.3
	50 대	71.9	26.4		정의당	92.5	7.5
	60 대 이상	65.7	29.0		없음/모름	55.7	37.0

- ⇒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광주/전남/전북(91.7%) ▶30 대(79.8%), 40 대(77.3%) ▶화이트칼라(77.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 '잘못하고 있다'는 ▶대구/경북(36.5%), 부산/울산/경남(33.2%) ▶60 대이상(29.0%) ▶자영업(36.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KANTAR PUBLIC Database: 국정지지도 추이 (%)

조사 시점(조사 주관)	긍정평가	부정평가
2017 년 8.14~15 (KBS-KANTAR 취임 백일 여론조사)	81.6	13.4
2017 년 12.27~28 (MBC-KRC 신년 여론조사)	77.2	16.9
2018 년 2.11~14 (SBS-KANTAR 여론조사)	67.4	26.8
2018 년 9.4~6 (한국갤럽 자체 조사)	49	42
2018 년 9.18~20 (한국갤럽 자체 조사)	61	30
본조사	72.1	24.2

- ⇒ 3 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전 진행된 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대까지 하락한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으나, 회담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효과에 힘입어 72.1%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주 발표되는 한국갤럽 자체조사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 국정운영 평가 요인

국정운영 평가 요인, '대북 및 북핵문제 대응' 51.4%

Q

방금 하신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전체 (n=99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n=74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n=244)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	51.4%	60.8%	23.6%
경제 정책	16.5%	4.5%	52.2%
전 정권 적폐 청산	15.2%	16.8%	10.3%
복지 정책	8.3%	10.0%	3.0%
인사 정책	1.7%	1.7%	1.9%
교육 정책	0.9%	0.9%	0.6%
기타	3.9%	3.1%	6.4%
모르겠다/무응답	2.1%	2.2%	2.1%

- 국정운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대북 및 북핵문제 대응(51.4%)'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60.8%)'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반면, 국정운영 부정평가층은 '경제 정책(52.2%)'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번 3차 남북정상 회담의 성과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북 및 북핵 문제 대응'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0.0%) ▶40대(5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8.4%), 정의당 지지층(67.5%)에서 특히 높았음.
- '경제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대구/경북(29.6%) ▶50대(21.8%) ▶자영업(23.8%), 학생(22.3%) ▶자유한국당 지지층(29.6%), 무당층(23.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정당지지도

'민주당' 41.1% vs. '한국당' 8.7% vs. '정의당' 8.0%

Q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의석수 순으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1%
자유한국당	8.7%
바른미래당	3.7%
민주평화당	0.8%
정의당	8.0%
기타 정당	1.4%
없다	29.6%
모르겠다	6.7%

-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한국당(8.7%), 정의당(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36.3%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더불어 민주당	자유 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기타정당	없다	모르겠다
전체		41.1	8.7	3.7	0.8	8.0	1.4	29.6	6.7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1.4	8.4	4.3	1.1	7.4	1.2	30.6	5.6
	대전/충청/세종	47.9	9.6	1.6	0.0	8.5	0.0	27.2	5.1
	광주/전남/전북	54.9	0.0	2.1	2.7	9.8	1.7	18.1	10.8
	대구/경북	26.5	14.8	4.5	0.0	4.8	2.6	35.9	11.0
	부산/울산/경남	36.9	11.2	3.6	0.0	7.5	2.3	31.2	7.3
	강원/제주	39.2	6.3	3.7	0.0	18.7	0.0	30.3	1.8
성별	남자	39.1	9.0	4.9	1.3	6.4	1.5	32.2	5.6
	여자	43.1	8.4	2.5	0.3	9.5	1.3	27.0	7.8
연령별	19-29 세	32.4	3.5	3.0	0.4	4.8	0.9	40.6	14.3
	30 대	50.5	2.9	1.9	1.6	6.5	0.0	33.7	3.0
	40 대	48.0	4.2	3.1	0.9	12.9	2.2	24.8	3.9
	50 대	39.8	11.8	4.9	1.4	11.5	0.9	26.5	3.1
	60 대 이상	36.6	17.1	4.8	0.0	4.4	2.4	25.7	9.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6.1	23.5	11.7	0.0	8.2	0.0	17.0	3.5
	자영업	36.2	9.1	5.3	2.0	8.0	1.3	34.6	3.5
	블루칼라	40.7	11.5	4.3	0.0	5.0	3.9	26.4	8.1
	화이트칼라	44.3	3.9	1.7	1.2	11.6	0.3	33.6	3.4
	가정주부	46.7	10.2	3.8	0.0	8.6	1.1	19.3	10.3
	학생	29.8	3.8	2.4	1.3	7.0	0.0	40.7	15.1
	무직/기타	40.0	13.2	4.3	0.6	3.2	2.1	29.5	7.1
소득별	100 만원 이하	41.8	16.8	3.3	0.0	3.0	2.8	20.9	11.4
	101~200 만원	45.7	9.3	2.6	0.0	5.8	3.8	24.5	8.4
	201~300 만원	34.0	13.2	4.4	1.4	7.0	0.6	32.2	7.3
	301~400 만원	35.4	8.5	6.1	1.1	9.1	0.7	32.4	6.9
	401 만원 이상	47.0	4.4	3.2	0.9	11.2	1.0	29.6	2.6

-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충청/세종(47.9%), 광주/전라(54.9%) ▶30 대(50.5%), 40 대(48.0%) ▶가정주부(46.7%) ▶401 만원이상 소득층(47.0%)에서 특히 높았음.
- ⇒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60 세이상(17.1%) ▶100 만원이하 소득층(16.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무당층'은 ▶대구/경북(35.9%) ▶20 대(19 세포함)(40.6%) ▶학생(40.7%)에서 높게 나타남.

KANTAR PUBLIC Database: [참고] 정당지지도 추이 (%)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 /모름
2018 년 2.11~14 (SBS-KANTAR 여론조사*)	47.9	14.9	8.1	1.6	5.6	1.3	20.6
2018 년 6.20~7.6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44.5	7.5	2.8	0.4	6.1	0.8	38.0
2018 년 8.14~16 (한국갤럽 자체조사*)	44	11	6	1	15	0	23
2018 년 9.11~13 (한국갤럽 자체조사*)	40	11	8	0.5	12	0	28
본 조사	41.1	8.7	3.7	0.8	8.0	1.4	36.3

- ⇒ SBS 2 월 조사는 지지정당 무응답자에게 재질문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사와 추이 비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매주 발표되는 갤럽의 정당지지도 역시 재질문 결과를 포함한 수치이며,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는 이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재질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 질문 문구와 재질문 유무에 따라 무당층의 규모가 달라져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다른 정당을 압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지지도가 2 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4.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남북정상회담 성과 평가, '성과 있었다' 78.5%

Q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성과가 있었다	42.5%	성과가 있었다 : 78.5%
다소 성과가 있었다	36.0%	
별로 성과가 없었다	11.1%	성과가 없었다 : 16.9%
전혀 성과가 없었다	5.8%	
모르겠다/무응답	4.6%	-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78.5%의 국민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음. 그 중에서도 '매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연령별 평가를 살펴보면, 30대(81.9%), 40대(83.3%)의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연령대는 20대(74.7%)인 것으로 분석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있었다	성과가 없었다
전체		78.5	16.9	전체		78.5	16.9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79.4	16.8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79.3	19.1
	대전/충청/세종	73.9	18.0		자영업	71.4	24.4
	광주/전남/전북	91.2	6.5		블루칼라	79.3	15.5
	대구/경북	69.9	24.3		화이트칼라	81.8	14.9
	부산/울산/경남	75.9	18.4		가정주부	80.3	17.3
	강원/제주	79.6	16.1		학생	77.1	14.1
					무직/기타	75.7	15.9
성별	남자	77.5	17.7	지지당별	더불어민주당	95.1	3.8
	여자	79.4	16.2		자유한국당	53.9	39.9
연령별	19-29 세	74.7	15.7	바른미래당	79.1	13.1	
	30 대	81.9	15.3	민주평화당	81.7	18.3	
	40 대	83.3	15.4	정의당	94.7	3.5	
	50 대	76.7	18.9	없음/모름	62.5	28.8	
	60 대 이상	76.5	18.4				

- ⇒ '성과가 있었다'는 ▶광주/전라(91.2%) ▶40 대(83.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9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1%), 정의당 지지층(94.7%)에서 특히 높았음.
- ⇒ '성과가 없었다'는 ▶대구/경북(24.3%) ▶자영업(24.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4%) ▶자유한국당 지지층(39.9%), 무당층(2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평양공동선언 최대 성과

평양공동선언 최대 성과, '전쟁위험 해소' 33.6%

<p>Q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내용 중 가장 뜻 깊은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p>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	33.6%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	23.5%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	13.9%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속 설치 및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	11.0%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6.7%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등 문화체육 분야 교류	1.3%
기타	1.3%
없다/모르겠다/무응답	8.7%

-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중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를 성과로 꼽은 응답(33.6%)이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23.5%가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를 공동선언의 성과로 지목하는 등 전반적으로 군사 문제와 관련한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밖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13.9%)',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조속 설치 및 영상편지 교환 우선 해결(11.0%)'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 ⇒ '남북간 적대 행위 중단 및 무력 사용 금지를 통한 전쟁위험 해소'는 ▶광주/전라(38.2%) ▶40 대(38.0%) ▶화이트칼라(37.2%) ▶401 만원이상 소득층(37.9%)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8.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9%)에서 특히 높았음.
- ⇒ '북한 영변 및 동창리 핵 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화 조치 첫 합의'는 ▶학생(26.8%) ▶201 만원-300 만원 소득층(3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 등 경제 협력'은 ▶20 대(19 세포함)(18.5%) ▶301 만원-400 만원 소득층(18.8%) ▶정의당 지지층(2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북한 핵무기 포기 전망

북한 핵무기 포기 전망, '긍정' 44.0% vs. '부정' 49.1%

Q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이 된다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다	44.0%
아니다	49.1%
모르겠다/무응답	6.9%

-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포기할 것으로 보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44.0%)'는 전망과 '아니다(49.1%)'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었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높게 평가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 30~50대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44.0	49.1	전체		44.0	49.1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7.9	45.7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1.0	57.0
	대전/충청/세종	36.5	53.2		자영업	42.4	53.5
	광주/전남/전북	62.3	29.6		블루칼라	47.4	48.8
	대구/경북	28.3	66.7		화이트칼라	55.0	39.3
	부산/울산/경남	34.5	58.9		가정주부	35.7	54.6
	강원/제주	47.0	47.5		학생	30.2	63.4
성별	남자	46.9	48.1	무직/기타	36.9	50.1	
	여자	41.2	50.1		지지당별	더불어민주당	62.6
연령별	19-29 세	30.1	63.1	자유한국당		8.7	87.0
	30 대	52.0	41.9	바른미래당		33.4	66.6
	40 대	57.8	39.6	민주평화당		55.4	44.6
	50 대	50.2	46.0	정의당		61.1	32.8
	60 대 이상	32.6	54.2	없음/모름		29.3	62.8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는 ▶광주/전라(62.3%) ▶30 대(52.0%), 40 대(57.8%), 50 대(50.2%) ▶화이트칼라(55.0%) ▶401 만원이상 소득층(52.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5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2.6%), 정의당 지지층(6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대구/경북(66.7%), 부산/울산/경남(58.9%) ▶20 대(19 세 포함)(63.1%) ▶가정주부(54.6%), 학생(63.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90.1%) ▶자유한국당 지지층(87.0%), 무당층(62.8%)에서 특히 높았음.

7. 남북미 종전선언 시점

남북미 종전선언 시점, '비핵화 조치 전까지 종전선언 해서는 안돼' 59.0%

Q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간 종전선언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59.0%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36.5%
모르겠다/무응답	4.4%

-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간 종전선언 시점에 대해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9.0%로 다수로 나타나,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높았음. 종전선언의 시점을 못박기 것보다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전체		59.0	36.5	전체		59.0	36.5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58.4	38.3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69.2	26.7
	대전/충청/세종	64.7	29.0		자영업	58.3	40.7
	광주/전남/전북	41.0	50.1		블루칼라	53.3	38.6
	대구/경북	68.8	28.7		화이트칼라	55.0	43.8
	부산/울산/경남	61.9	32.4		가정주부	65.0	26.8
	강원/제주	60.9	36.7		학생	69.4	27.0
						무직/기타	61.7
성별	남자	56.7	39.8	지지당별	더불어민주당	49.3	46.7
	여자	61.3	33.3		자유한국당	79.7	16.3
연령별	19-29세	74.6	21.6		바른미래당	59.9	36.4
	30대	60.0	38.6		민주평화당	39.8	60.2
	40대	47.7	49.1		정의당	39.8	58.6
	50대	53.2	40.4		없음/모름	69.1	25.0
	60대 이상	61.3	32.4				

- ⇒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대전/충청/세종(64.7%), 대구/경북(68.8%) ▶20대(19세 포함)(74.6%) ▶가정주부(65.0%), 학생(69.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4.5%) ▶자유한국당 지지층(79.7%), 무당층(69.1%)에서 특히 높았음.
- ⇒ '연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광주/전라(50.1%) ▶40대(49.1%) ▶화이트칼라(43.8%)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6.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6.7%), 정의당 지지층(5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8. 작년과 살림살이 비교

작년 대비 살림살이 비교, '별 변화없다' 56.2%

Q

귀 닥의 살림살이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졌다	14.4%
별 변화가 없다	56.2%
더 나빠졌다	28.9%
모르겠다/무응답	0.5%

- 작년 이 맘때와 비교해 살림살이에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14.4%,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28.9%로 조사됨. 월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층의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100만원 이하: 41.7%, 101~200만원: 35.3%),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더 나아졌다	별 변화가 없다	더 나빠졌다			더 나아졌다	별 변화가 없다	더 나빠졌다
전체		14.4	56.2	28.9	전체		14.4	56.2	28.9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15.1	57.9	26.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0	57.7	39.2
	대전/충청/세종	18.2	55.4	25.4		자영업	9.5	46.3	44.2
	광주/전남/전북	19.2	57.8	23.0		블루칼라	12.8	53.4	33.3
	대구/경북	7.0	55.5	36.8		화이트칼라	24.1	56.5	19.5
	부산/울산/경남	11.5	48.6	39.3		가정주부	8.2	57.3	34.5
	강원/제주	14.3	62.2	23.4		학생	18.2	64.5	14.1
						무직/기타	8.6	63.5	26.1
성별	남자	15.1	54.2	30.0	소득별	100만원 이하	7.7	49.5	41.7
	여자	13.7	58.1	27.7		101~200만원	9.5	55.2	35.3
연령별	19-29세	19.2	62.3	16.5		201~300만원	12.5	57.0	29.9
	30대	18.8	59.7	21.5		301~400만원	17.5	57.0	25.5
	40대	16.8	54.0	28.6		401만원 이상	17.5	58.4	24.0
	50대	14.5	48.6	36.4					
	60대 이상	6.4	57.2	36.3					

- ⇒ '더 나아졌다'는 ▶화이트칼라(2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별 변화가 없다'는 ▶20대(19세포함)(62.3%) ▶학생(64.5%)에서 특히 높았음.
- ⇒ '더 나빠졌다'는 ▶50대(36.4%), 60세이상(36.3%) ▶자영업(44.2%), 가정주부(34.5%) ▶100만원이하 소득층(41.7%), 101만원-200만원 소득층(3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9.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이나 속도 조절 필요' 53.2%

Q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22.2%
일부 보완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53.2%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18.3%
모르겠다/무응답	6.3%

-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대해 '원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로 나타났으며, '일부 보완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18.3%였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계획대로 계속 추진	일부 보완이나 속도 조절	전면 수정이나 폐기
전체		22.2	53.2	18.3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22.8	55.3	16.7
	대전/충청/세종	22.8	50.6	17.5
	광주/전남/전북	29.2	50.3	11.3
	대구/경북	11.5	57.8	23.6
	부산/울산/경남	23.2	44.9	25.1
	강원/제주	18.9	60.1	19.0
성별	남자	23.4	50.1	22.2
	여자	21.0	56.2	14.5
연령별	19-29 세	16.5	60.5	12.0
	30 대	25.6	55.4	16.6
	40 대	28.8	53.0	15.9
	50 대	22.3	52.0	21.9
	60 대 이상	18.6	47.8	22.8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25.8	35.8	25.5
	자영업	18.1	46.9	32.7
	블루칼라	19.1	53.8	18.0
	화이트칼라	29.0	53.5	15.8
	가정주부	19.1	55.8	14.5
	학생	12.8	66.2	9.0
	무직/기타	24.0	51.4	17.8
소득별	100 만원 이하	25.8	33.7	16.6
	101~200 만원	19.8	58.6	14.6
	201~300 만원	16.6	54.4	24.7
	301~400 만원	22.7	63.3	12.9
	401 만원 이상	24.8	53.2	19.5
국정운영 평가별	긍정평가	28.9	60.1	5.5
	부정평가	4.2	33.8	56.9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34.4	55.6	5.7
	자유한국당	8.9	43.7	42.3
	바른미래당	11.0	52.3	36.7
	민주평화당	30.8	29.4	30.6
	정의당	25.4	65.4	6.2
	없음/모름	12.0	51.7	26.5

- ⇒ '계획대로 계속 추진'은 ▶광주/전라(29.2%) ▶40 대(28.8%) ▶화이트칼라(29.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일부 보완이나 속도 조절'은 ▶20 대(19 세포함)(60.5%) ▶학생(66.2%) ▶101 만원-200 만원 소득층(58.6%), 301 만원-400 만원 소득층(63.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1%) ▶정의당 지지층(65.4%)에서 특히 높았음.
- ⇒ '전면 수정이나 폐기'는 ▶대구/경북(23.6%), 부산/울산/경남(25.1%) ▶자영업(32.7%) ▶201 만원-300 만원 소득층(24.7%)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6.9%) ▶자유한국당 지지층(42.3%), 무당층(2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0. 우리 경제 당면 과제

경제 당면 과제,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 29.7%

Q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	29.7%
계층 간 양극화 심화	21.8%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성장 동력 약화	18.4%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14.6%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 등 국제 통상 갈등	5.6%
각종 규제에 의한 신 산업 위축	5.0%
기타	2.3%
없다/모르겠다/무응답	2.5%

-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29.7%)'가 가장 큰 것으로 지목되었음.
- '계층 간 양극화 심화'가 21.8%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성장 동력 약화(18.4%)',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14.6%)'이 그 뒤를 나옴.
-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은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를 경제 당면 과제로 특히 높게 꼽고 있어 고용 및 취업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30~40대 연령층은 '계층 간 양극화 심화'를 1순위 문제로 꼽고 있어(30대: 27.4%, 40대: 28.2%), 이들 연령층은 사회 분배 문제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	계층 간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성장 동력 약화	집값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 등 국제 통상 갈등	각종 규제 인한 신 산업 위축
전체		29.7	21.8	18.4	14.6	5.6	5.0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27.9	22.0	17.2	17.9	5.7	4.5
	대전/충청/세종	32.3	19.8	20.2	11.2	6.7	6.1
	광주/전남/전북	23.4	25.5	24.3	10.9	2.8	2.5
	대구/경북	38.4	20.9	13.8	14.7	5.8	4.5
	부산/울산/경남	36.2	19.8	17.5	6.2	7.0	7.9
	강원/제주	12.8	26.4	27.4	24.7	2.4	4.3
성별	남자	32.5	19.6	19.8	10.0	6.0	6.6
	여자	26.9	24.1	16.9	19.2	5.2	3.4
연령별	19-29 세	39.2	15.8	14.8	15.9	4.1	5.7
	30 대	19.7	27.4	19.7	21.9	3.8	3.9
	40 대	25.1	28.2	19.9	10.3	7.2	6.8
	50 대	32.2	19.0	17.9	15.2	7.8	3.6
	60 대 이상	31.4	19.5	19.0	11.9	4.9	4.9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4.0	20.5	22.3	5.5	8.9	4.7
	자영업	30.1	24.0	20.2	10.0	3.9	6.3
	블루칼라	29.9	23.0	15.5	17.7	6.6	3.1
	화이트칼라	21.8	26.4	20.3	15.8	5.9	7.5
	가정주부	29.6	18.1	17.0	18.8	6.5	3.5
	학생	44.9	16.6	14.1	12.6	3.7	5.4
	무직/기타	37.5	15.5	19.7	10.4	3.9	2.3
	소득별	100 만원 이하	34.0	12.9	20.4	13.2	7.5
101~200 만원	24.4	20.6	26.2	15.8	4.8	2.3	
201~300 만원	34.2	19.5	15.5	16.5	4.3	8.1	
301~400 만원	26.7	26.5	14.3	19.6	5.8	2.3	
401 만원 이상	27.0	24.3	18.9	12.9	6.9	7.2	
국정운영 평가별	긍정평가	25.3	25.3	21.0	15.5	5.4	3.1
	부정평가	40.9	13.6	11.6	13.0	6.1	10.3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23.0	27.2	21.1	15.5	5.7	2.5
	자유한국당	44.5	13.4	17.6	11.2	6.2	5.8
	바른미래당	25.2	20.2	19.4	15.1	12.4	3.8
	민주평화당	12.3	9.4	24.6	18.5	9.2	26.0
	정의당	29.5	31.2	21.2	11.1	3.0	3.1
	없음/모름	34.3	15.6	14.9	15.4	4.9	7.9

- ⇒ '일자리 문제와 고용 악화'는 ▶대구/경북(38.4%), 부산/울산/경남(36.2%) ▶20 대(19 세포함)(39.2%) ▶학생(44.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0.9%) ▶자유한국당 지지층(44.5%)에서 특히 높았음.
- ⇒ '계층 간 양극화 심화'는 ▶40 대(2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2%), 정의당 지지층(3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성장 동력 약화'는▶광주/전라(24.3%) ▶101 만원-200 만원 소득층(2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1.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주택 공급 확대' 44.7% vs. '주택 수요 억제' 44.2%

Q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효과적인 대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규 택지 개발, 도심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44.7%
	주택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주택 수요 억제 44.2%
	모르겠다/무응답 11.1%

-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택지개발, 도심 재건축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7%,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비슷하게 나타남.
- 주택 보유 여부와 연령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음.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택 소유자와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택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택 비소유자와 20대~40대에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수요 억제			주택 공급 확대	주택 수요 억제
전체		44.7	44.2	전체		44.7	44.2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6.2	44.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4.3	40.7
	대전/충청/세종	40.5	46.3		자영업	55.0	36.9
	광주/전남/전북	31.6	55.5		블루칼라	42.8	43.6
	대구/경북	45.8	40.1		화이트칼라	45.6	48.8
	부산/울산/경남	49.4	39.1		가정주부	40.8	43.2
	강원/제주	49.1	42.1		학생	37.4	54.6
					무직/기타	45.9	38.8
성별	남자	47.7	42.1	소득별	100만원 이하	41.5	36.7
	여자	41.7	46.4		101~200만원	48.5	41.5
연령별	19-29세	41.1	50.4		201~300만원	42.0	46.7
	30대	41.4	49.7		301~400만원	43.3	44.9
	40대	45.1	49.6		401만원 이하	46.9	47.9
	50대	41.6	44.5		주택 소유	47.9	40.6
	60대 이상	51.4	32.1		주택 비소유	38.3	51.5

- ⇒ '택지개발,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60세이상(51.4%) ▶자영업(55.0%)에서 특히 높았음.
- ⇒ '보유세·양도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주택 수요 억제'는 ▶광주/전라(55.5%) ▶20대(19세포함)(50.4%), 30대(49.7%), 40대(49.6%) ▶학생(54.6%) ▶주택비소유층(5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2. 9·13 대책 효과 전망

9·13 대책, '단기적 효과 있겠지만, 오래 못 갈 것이다' 50.3%

Q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다주택 소유자와 투기 목적의 1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5.0%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50.3%
매물 부족 현상을 불러 와 집값을 더 상승시킬 것이다	17.3%
모르겠다/무응답	7.5%

- 9·13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0.3%로 과반이었고,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자는 25.0%의 비율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	집값을 더 상승시킬 것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	집값을 더 상승시킬 것		
전체		25.0	50.3	17.3	전체		25.0	50.3	17.3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25.2	49.3	19.7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29.8	47.0	12.1		
	대전/충청/세종	19.6	56.7	14.9		자영업	24.2	53.0	19.1		
	광주/전남/전북	35.3	49.7	6.6		블루칼라	25.6	52.5	14.4		
	대구/경북	21.8	46.0	22.5		화이트칼라	30.4	47.9	18.4		
	부산/울산/경남	22.0	52.1	15.3		가정주부	15.5	53.9	15.9		
	강원/제주	29.7	49.9	15.5		학생	16.8	60.7	16.8		
성별	남자	25.5	51.1	17.6	주택소유	무직/기타	29.0	38.1	20.7		
	여자	24.4	49.4	17.0		소	100 만원 이하	21.7	37.3	21.0	
연령별	19-29 세	18.6	59.9	16.1		특	101~200 만원	25.4	42.5	20.9	
	30 대	27.9	46.1	22.0		별	201~300 만원	22.7	58.4	12.1	
	40 대	31.2	47.8	16.7			301~400 만원	27.3	52.5	15.2	
	50 대	25.4	51.2	17.4			401 만원 이하	28.4	50.7	18.4	
	60 대 이상		22.2	47.6		15.5	주택 소유	주택 소유	24.9	50.4	17.8
							주택 비소유	주택 비소유	25.5	49.6	16.6

- ⇒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의 효과 있을 것'은 ▶광주/전라(35.3%) ▶40 대(31.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31.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6%), 정의당 지지층(3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단기적으로 효과 있겠지만 오래 못 갈 것'은 ▶대전/충청/세종(56.7%) ▶20 대(19 세포함)(59.9%) ▶학생(60.7%) ▶201 만원-300 만원 소득층(58.4%) ▶무당층(55.4%)에서 특히 높았음.
- ⇒ '매물 부족 현상을 불러와 집값을 더 상승시킬 것'은 ▶대구/경북(22.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 ▶자유한국당 지지층(3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3. 주택공급 확대 방안 평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도심 노후 주택 지역 재건축 활성화' 34.9%

Q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도심 노후 주택 지역 재건축 활성화	34.9%
서울 인접 신도시 개발	21.5%
서울 철도부지나 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 활용	18.9%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12.4%
없다/모르겠다/무응답	12.3%

-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노후 주택 지역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인접 신도시 개발' 방안이 21.5%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남.
- '서울 철도부지나 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 활용'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9%,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방안을 응답한 비율은 12.4%로 가장 나타남.
-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재건축, 유휴지 활용 등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 도심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도심 노후 주택 지역 재건축 활성화	서울 인접 신도시 개발	서울 철도부지나 구치소 부지 등 유휴지 활용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전체		34.9	21.5	18.9	12.4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36.8	21.5	21.2	10.9
	대전/충청/세종	40.3	17.9	13.3	17.1
	광주/전남/전북	27.0	25.0	17.8	15.3
	대구/경북	28.3	21.3	15.3	14.0
	부산/울산/경남	34.5	21.0	18.1	12.7
	강원/제주	35.0	24.4	22.1	4.9
성별	남자	33.6	23.4	18.1	14.5
	여자	36.2	19.6	19.8	10.3
연령별	19-29 세	39.3	27.7	11.4	11.0
	30 대	34.2	27.7	18.0	10.1
	40 대	32.8	25.3	23.7	9.6
	50 대	37.9	17.9	18.6	12.4
	60 대 이상	31.7	13.0	21.3	17.0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29.9	21.4	7.3	20.4
	자영업	32.1	23.6	14.5	19.4
	블루칼라	32.4	20.9	20.9	11.9
	화이트칼라	41.8	22.5	20.7	8.1
	가정주부	32.5	11.4	23.4	13.6
	학생	39.1	29.5	10.6	9.0
	무직/기타	27.6	26.3	19.0	13.0
소득별	100 만원 이하	27.0	10.4	14.4	19.6
	101~200 만원	30.8	17.3	23.9	15.6
	201~300 만원	39.9	18.1	14.7	15.7
	301~400 만원	36.4	27.5	17.8	8.6
	401 만원 이하	36.6	25.4	19.8	10.9
주택 소유별	주택 소유	34.0	21.8	18.4	12.3
	주택 비소유	36.3	20.9	20.3	12.8

- ⇒ '도심 노후 주택 지역 재건축 활성화'는 ▶대전/충청/세종(40.3%) ▶화이트칼라(41.8%)에서 특히 높았음.
- ⇒ '서울 인접 신도시 개발'은 ▶20 대(19 세포함)(27.7%), 30 대(27.7%) ▶학생(29.5%) ▶301 만원-400 만원 소득층(2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일부 해제'는 ▶자영업(1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4. 주택공급확대 대책 효과

'투기 수요와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 51.2%

Q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등 부동산 과열 지역의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신규 택지나 재개발 지역에 투기 수요와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51.2%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35.6%
모르겠다/무응답	13.3%

-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으로 '신규 택지나 재개발 지역에 투기 수요와 자금이 몰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51.2%로 과반으로 나타났으며,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은 35.6% 비율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집값 상승	집값 안정			집값 상승	집값 안정
전체		51.2	35.6	전체		51.2	35.6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53.0	36.3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36.8	45.0
	대전/충청/세종	58.1	31.6		자영업	53.1	35.8
	광주/전남/전북	36.5	44.3		블루칼라	46.3	38.1
	대구/경북	52.4	29.9		화이트칼라	53.1	37.8
	부산/울산/경남	51.1	31.7		가정주부	49.3	31.2
	강원/제주	43.9	44.4		학생	69.2	25.2
성별	남자	51.9	37.1	소득별	무직/기타	46.5	37.0
	여자	50.4	34.0		100만원 이하	32.7	44.1
연령별	19-29세	67.0	24.8		101~200만원	47.5	37.4
	30대	55.4	31.3		201~300만원	58.8	28.5
	40대	45.0	44.1		301~400만원	44.9	42.7
	50대	54.8	33.3		401만원 이하	54.5	37.4
	60대 이상	39.4	40.9	주택소유	주택 소유	50.2	36.1
				주택 비소유	52.9	34.8	

- ⇒ '신규 택지나 재개발 지역에 투기 수요와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은 ▶대전/충청/세종(58.1%) ▶20대(19세포함)(67.0%) ▶학생(69.2%) ▶201만원-300만원 소득층(58.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3%) ▶무당층(59.1%)에서 특히 높았음.
- ⇒ '양질의 주택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은 ▶광주/전라(44.3%) ▶40대(44.1%) ▶301만원-400만원 소득층(42.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4.9%), 정의당 지지층(4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5.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

주 52시간 근로제 효과, '임금 감소, 인력 부족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56.2%

Q 지난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 중 어떤 점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하지 못해 임금이 줄어 들고, 기업은 인력 부족을 겪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56.2%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36.7%
모르겠다/무응답	7.2%

-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해 임금이 줄고, 인력 부족을 겪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56.2%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노동시간이 줄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은 36.7%로 조사되었음.
-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에서는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자영업 종사자에서는 부정 평가(69.2%)가 특히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부정적 효과가 크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	긍정적 효과가 크다
전체		56.2	36.7	전체		56.2	36.7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55.2	39.1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74.2	19.5
	대전/충청/세종	55.9	36.6		자영업	69.2	28.6
	광주/전남/전북	46.1	42.5		블루칼라	59.7	34.3
	대구/경북	65.4	27.8		화이트칼라	44.8	47.1
	부산/울산/경남	60.7	30.7		가정주부	59.1	29.8
	강원/제주	53.2	38.0		학생	55.5	40.9
					무직/기타	55.4	35.1
성별	남자	59.4	35.2	소득별	100만원 이하	59.0	26.8
	여자	53.0	38.2		101~200만원	57.3	39.0
연령별	19-29세	53.5	43.1		201~300만원	64.6	30.9
	30대	47.5	45.0		301~400만원	60.6	33.3
	40대	49.0	45.1		401만원 이하	51.0	43.2
	50대	61.6	31.2				
	60대 이상	65.0	24.6				

- ⇒ '임금 감소, 인력 부족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대구/경북(65.4%) ▶50대(61.6%), 60세이상(65.0%) ▶자영업(69.2%) ▶201만원-300만원 소득층(64.6%) ▶국정운영 부정평가층(82.6%) ▶자유한국당 지지층(76.9%), 무당층(66.4%)에서 특히 높았음.
- ⇒ '노동시간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광주/전라(42.5%) ▶20대(19세포함)(43.1%), 30대(45.0%), 40대(45.1%) ▶화이트칼라(47.1%) ▶401만원이상 소득층(43.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6.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3%), 정의당 지지층(4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6. 2020년 최저임금 수준

2020년 최저임금, '8,350원 동결' 40.2% vs. '인상 필요' 53.9%

Q 내년도 최저 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0년의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8,350원으로 동결	40.2%
8,350원 초과~9,000원 미만	25.4%
9,000원 이상~10,000원 미만	19.1%
10,000원 이상	9.4%
모르겠다/무응답	5.9%

- 2020년 최저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0.2%로 나타났고, 인상률을 떠나 8,350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높게 나타났음.
-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중 8,350원 초과 9,000원 미만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로 가장 높았고, 9,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이 19.1%, 10,000원 이상이 9.4%로 뒤를 이어 높게 조사되었음.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8,350 원으로 동결	8,350원 초과 ~9,000원 미만	9,000 원 이상 ~10,000 원 미만	10,000원 이상	모르겠다 /무응답
전체		40.2	25.4	19.1	9.4	5.9
권역별	서울/인천/경기	40.2	25.8	18.9	10.4	4.6
	대전/충청/세종	37.0	18.8	29.6	12.3	2.2
	광주/전남/전북	35.1	31.1	16.7	6.3	10.8
	대구/경북	52.9	23.2	8.9	7.3	7.8
	부산/울산/경남	37.7	24.7	19.9	9.3	8.4
	강원/제주	38.1	33.3	22.3	2.4	3.9
성별	남자	42.1	22.6	19.3	11.3	4.6
	여자	38.3	28.2	18.9	7.6	7.1
연령별	19-29 세	34.4	27.9	26.5	10.1	1.1
	30 대	32.2	31.2	23.5	10.3	2.9
	40 대	37.0	24.8	22.5	12.5	3.3
	50 대	44.7	26.7	13.9	8.1	6.7
	60 대 이상	48.4	19.6	12.7	6.9	12.4
직업별	농업/임업/어업	58.3	16.5	1.6	7.5	16.1
	자영업	57.3	20.0	12.0	5.0	5.6
	블루칼라	34.4	26.3	21.1	14.3	3.9
	화이트칼라	30.0	28.9	26.5	11.4	3.2
	가정주부	43.1	26.1	15.2	4.9	10.7
	학생	44.6	30.9	15.5	9.0	0.0
	무직/기타	42.5	20.2	18.5	8.7	10.1
소득별	100 만원 이하	44.5	21.7	9.0	9.5	15.3
	101~200 만원	38.8	20.4	20.0	12.3	8.4
	201~300 만원	45.8	23.2	20.5	6.6	3.9
	301~400 만원	41.7	26.0	17.2	10.5	4.7
	401 만원 이하	38.4	29.5	21.5	9.0	1.7
국정운영 평가별	긍정평가	33.7	29.1	22.8	10.8	3.6
	부정평가	60.0	15.4	9.9	5.3	9.3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31.4	29.8	24.0	11.0	3.8
	자유한국당	61.5	14.1	8.0	3.4	13.1
	바른미래당	58.9	24.2	11.6	0.0	5.3
	민주평화당	42.7	17.1	21.7	18.5	0.0
	정의당	31.3	31.4	23.5	12.9	0.9
	없음/모름	44.5	22.8	16.3	8.9	7.5

- ⇒ '8,350 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 대구/경북(52.9%) ▶ 60 세이상(48.4%) ▶ 자영업(57.3%) ▶ 201 만원-300 만원 소득층(45.8%) ▶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0.0%) ▶ 자유한국당 지지층(61.5%) ▶ 주택소유층(46.1%)에서 특히 높았음.
- ⇒ '8,350 원 초과 9,000 원 미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 광주/전라(31.1%) ▶ 30 대(31.2%) ▶ 학생(30.9%) ▶ 정의당 지지층(31.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9,000 원 이상 10,000 원 미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 대전/충청/세종(29.6%) ▶ 20 대(19 세포함)(26.5%) ▶ 화이트칼라(26.5%) ▶ 주택비소유층(2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